대법관 후보 5명 인준 무난할 듯

재산·도덕성·자질 등 크게 문제 안돼

일부 특위위원 안대희 '부적합' 의견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김능환·박일환·안대희·이홍훈·전수안 대법관 후보자 5명에 대해 28일 개인별 검증을 마무리함에 따라 후보자들의 인준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은 이번 인사청문회가 그동안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의 단골 메뉴였던 '이념·사상 검증' 등 특별한 쟁점없이 진행됐고, 후보자들의 재산이나 도덕성에 대한 특별한 결격 사유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난한 인준이 예상된다.

다만 대검 중수부장 시절 불법대선자금과 현대그룹 비자금 사건을 담당했던 안대희 후보의 경우, '구원'이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각에서는 다소 탐탁지 않다는 반응도 나왔으나 대세에 지장을 줄만한 변수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은 후보자 5명에 대해 대체로 후한 평가를 내렸다.

청문특위 우리당 간사인 이종걸 의원은 "후보자 모두 법조계에서 두루 존경받는 분들이고, 도덕성 면에서도 크게 흠잡을 데 없다"고 평가했고, 김동철 의원도 "도덕성과 자질 면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은 "자질이나 도덕성 부문에서는 크게 문제 없다"면서도 "다양성 면에서 기대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보수적 성향도 강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청문위원들도 후보자 5명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김영덕·김기현·김재경 의원은 "5명 모두 특별한 흠결이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기현 의원은 "전수안 후보자의 경우, 사법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참여연대에 기고한 글과는 다른 입장을 많이 드러낸 점으로 봐서 시류에 영합한 것이 아니냐는 개인적 우려는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의원은 안대희 후보자에 대해 "특수수사만 하던 검사장 출신이 대법관으로 오는 것은 반대"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여성인 전 후보에 대해서는 "여성 우대 케이스인지 확신이 안 서 보류"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청문위원인 이상열 의원은 "법관 출신 4명의 후보자 모두는 실력이나 인품, 도덕성 등에서 문제가 없다"면서도 "다만 안 후보자는 중수부장 재직시 활동이 일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다. 안 후보자의 인준 여부는 의총을 통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청문특위는 29일 후보자 5명을 대상으로 종합질의를 진행하며, 여야 각 당은 30일 본회의 직전 각각 의총을 열어 당론 또는 의원들의 자유투표 등 내부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법관 후보자 쟁점별 입장

쟁점 \ 후보자	김능환	박일환	안대희	이홍훈	전수안
국가 보안법 개폐	외환죄와 간첩죄만으로 현실규율 곤란. 국보법과 같은 별도의 법률이 필요	내란죄만으로 국보법 대체 하기는 부족.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수호에 필요한 사항은 존치 필요	존치이유는 충분히 있지만 역사적 오남용 지적. 문제점 개선해 합리적 검토 필요	적절한 국가 존립과 사법질서 보호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정·보완 필요	국회에서 의사합치 이루는게 선결 문제
사형제 존폐	폐지	범죄예방적 측면에서 폐지는 시기상조	폐지론도 근거있다고 생각. 개인적으로 고민중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체	사형제 폐지하고 가석방없는 종신제 도입해야
간통제 존폐	-	폐지검토	여성보호대책 마련하면서 폐지해야	국민의 전체적 의견을 보면 폐지 고려 할 수 있다	폐지여부 검토할 때 가 됐다
과거사정리 및 재심확대	재심사유 확대는 신중한 접근 필요	-	재심통해 해결. 대법원장이 적절히 정리할것	법적 안정성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재심사유 확대	어느정도 인정된다면 대법원장이 용서구할 필요있다
전관예우	전관예우 없다	-	없지 않나 한다	-	국민이 왜 그런 생각하는지 생각해야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결의한 가운데 이계경 의원이 김영선 대표와 이재오 원내대표에게 뭔가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성 국세청장 돌연 사퇴 왜?

배경싸고 說 난무… 관가 술렁

한나라 "지방선거 참패 책임 경질 아닌가"

우리당 "터무니없는 발상… 확대해석 말라"

청와대 "후배들에게 길 터주기 위한 용퇴"

이주성 국세청장의 돌연한 사퇴를 놓고 28일 하룻동안 정치권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청와대는 이 청장의 사퇴가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책임이라는 일부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경제 부처가 밀집된 과천 관가는 이 청장의 사퇴 배경을 추론하며 술렁거렸다.

◆여야 공방=여야는 이 청장의 사퇴 배경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5·31 지방선거 책임론과 관련해 여당의 사퇴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열린우리당은 "터무니없는 발상"이라며 정치적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국세청장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일한 것도 아니고 정부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는 자리인데, 그 쪽으로 책임을 돌린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부와 여당의 갈등요소를 보여주는 종합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사퇴압력설에 대해 "상임위 출석을 위해 참석한 기관장에게 당 지도부가 사퇴를 종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근태 의장을 면담하러 온 기관장이 10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사퇴했느냐"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는 최근 지방국세청장 인선 과정에서 치열한 내부인사 경합, 상급 부처인 재경부와의 이견 등이 빚어졌고, 그 부담을 털기 위해 사퇴를 결심했다는 관측도 돌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계 투기자본 과세를 둘러싼 한덕수 경제부총리와의 불화설 등 재경부와의 갈등설도 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해명=청와대는 28일 이 청장의 돌연한 사퇴 배경을 놓고 '청와대 인사갈등설', '선거참패 책임설', '청와대 민정팀 내사설' 등 각종 관측들이 무성한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하며 "후진을 위해 용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의 사의 표명이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등 여당 지도부로부터 5·31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를 종용받은 데 따른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 청와대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청장의 부동산 명의신탁 등 투기 의혹설이나 개인 비위와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으나,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며, 그 같은 의혹설도 확인되지 않은 얘기"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 청장을 둘러싼 '루머'들에 대해 '사실점검' 작업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 청장의 사퇴와 7월 초로 예상되는 개각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개각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차관급 사표와 개각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관가 표정=이주성 국세청장이 돌연 사퇴하자 과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이 청장의 사퇴가 본인의 공식 발표대로 건강상의 이유나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한 용퇴라면 모르지만 일각의 관측대로 선거패배에 대한 책임 때문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28일 재경부와 건교부 등에 따르면 이 청장의 사퇴 소식이 전해진 이후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정부 내에서는 이 청장이 사퇴한 '진짜' 배경이 무엇인지가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청장 사퇴의 배경이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것이라면 국세청보다 부동산과 세금의 주무부처인 재경부나 건교부 등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재경부를 둘러싼 각종 악재와 리더십 논란으로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한덕수 부총리는 물론 추병직 건교부 장관의 거취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 집권하면 기관장 다 감옥간다"

공성진 의원 상임위 발언 정치권 논란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사진>이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기관장을 상대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다 뒤집히고 감옥에 간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인 공 의원은 27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김정일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 등에게 일독을 권했던 청와대 배기찬 동북아시대위원회 비서관의 저서인 '코리아 기로에 서다'를 거론하며 "지나친 자주에 대한 강조가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자주국방을 지나치게 하기 위해 오히려 틈새(시장)를 놓치는 것 아니냐"면서 "TA-50을 개량해 조금 작은 F-16으로 만드는 게 더 나은데 굳이 미국이 만들고 있는 F-35나 45와 같은 걸로 만들겠다는 것은 오히려 '코리아 기로에 서다'가 말하는 대통령의 요지와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본적으로 방사청장의 철학과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라며 "안 그러고 나중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전부 다 뒤집힌다. 다 감옥가고. 예를 들면 그런 사건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 문제는 수 조원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라고 덧붙였다.

공 의원은 앞서 김 청장을 상대로 "의사결정 구조가 획일적으로 단선화되면 자칫하면 감옥에 갈 수 있는 개연성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감옥'이란 표현을 거듭 사용하기도 했다.

공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당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5·31 지방선거 압승 이후 우려했던 오만함의 표출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소장파 의원은 "국익을 논하는 국회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국민에게 오만하게 비칠 수밖에 없다"면서 "당으로서도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양기대 수석 부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국방사업 담당자들을 마치 잠재적 범법자로 몰아 협박했다"며 "지방선거 승리로 벌써부터 집권이나 한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한나라당을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우리 함께 축하해'

'비평그룹 21세기 문화광장' 단체장 취임 축가 제작 배포

'사랑과 용기로 지혜와 덕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더 살기 좋은 세상 만들고/ 우리는 존경과 믿음으로 힘 합하여 더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요/ 우리 사는 ○○을 더 행복한 곳으로/ 축하합니다○○○ 시장님(군수님)/ 우리 시장님(군수님) 축하합니다/ 브라보!'

오는 7월 1일 민선 4기 출범을 앞두고 자치 단체장 취임 축가가 만들어졌다.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비평그룹 21세기 문화광장'(대표 탁계석·음악평론가)은 취임축하곡 '우리 함께 축하해'(작사 탁계석·작곡 이철우)를 제작, 전국 시·도·군에 무료로 배포한다.

문화광장은 소프라노 이한나킴, 서울콘서트합창단 등이 각 지역 도지사와 시장, 군수의 이름을 넣어 부른 곡을 CD와 MP3 파일로 제작, 각 자치단체에 배부하며 구청에는 악보와 음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02-518-856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국세청장 전군표씨 유력

靑 빠르면 오늘 후임 발표

청와대는 빠르면 29일 사표가 수리된 이주성 전 국세청장의 후임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후임 국세청장에는 전군표 국세청 차장의 승진 기용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후임 국세청장 후보군들에 대한 검증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29일 인사추천회의 심의를 거쳐 인선절차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가급적 빨리 검증작업을 마무리해서 후임자를 선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부작용이 있을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 ·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흉터흔적을 지우자!

벤트락스겔은 흉터치료를 위한 의약품입니다.

상처로 인한 흉터 + 수술로 인한 흉터 + 화상으로 인한 흉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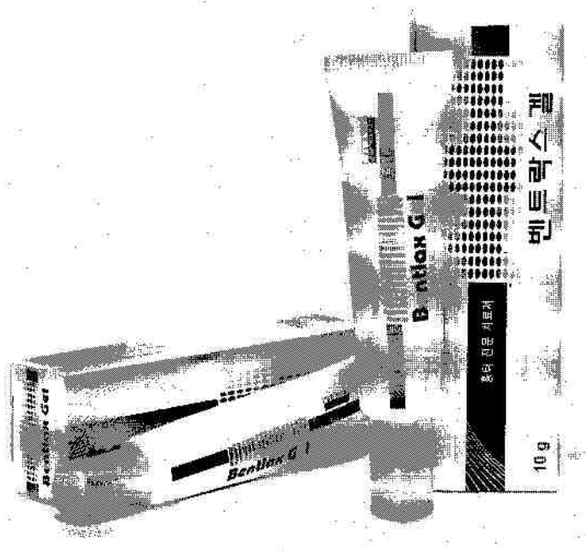
벤트락스겔로 해결하세요.

●흉터치료제

벤트락스겔

간편하게 바르는 겔타입의 흉터치료제 벤트락스겔은 피부조직 깊숙히 흡수하여 오래되거나 갓생긴 크고, 작은 상처의 흉터자국을 치료해 주는 의약품입니다.

약국에서 구입하실수 있습니다.



흉터 치료제 벤트락스 겔

Bentlax Gel

태극약품 ● 서울 02)3474-7761 FAX 02)3472-6501 ● 대전 042)253-3086 ● 부산 051)631-0831 ● 마산 055)248-7762 ● 광주 062)524-7553 ● 대구053)764-2751 정보제공 : www.taiguk.co.kr 080-300-8282